
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

2023. 12. 6.



교육자치협력안전국
교육발전특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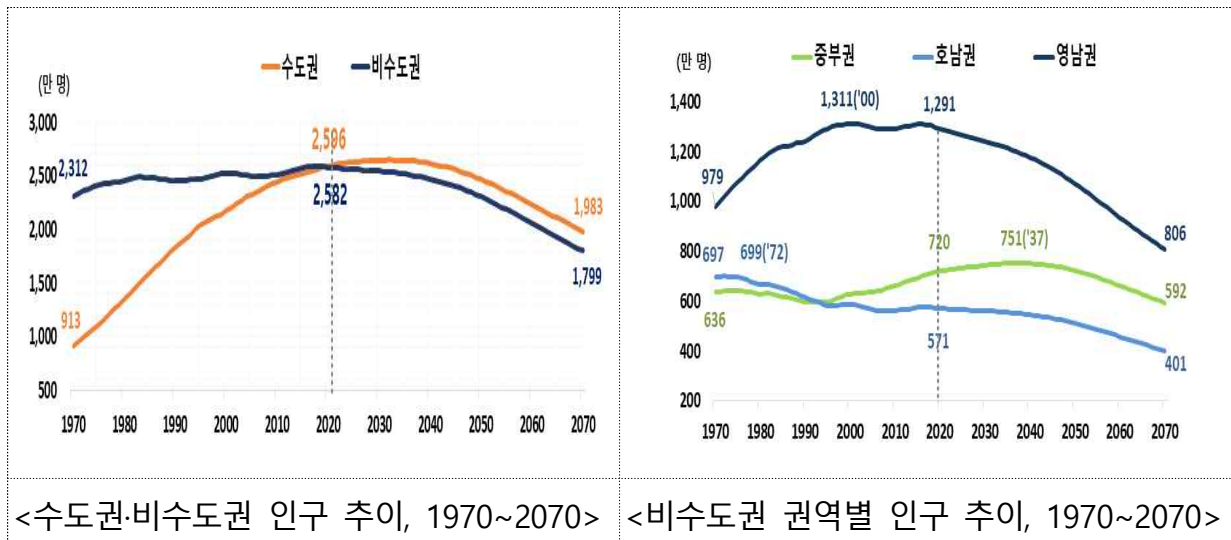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추진 배경.....	1
II.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.....	2
III. 교육발전특구 운영.....	5
IV. 시범지역 지정 계획.....	8
V. 추진 일정.....	11

I. 추진 배경

-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

※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수도권 인구 대비 비수도권 인구의 감소세 지속



- ⇒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추구

※ '23년 대통령 신년사 : "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."
"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."

-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

- ⇒ 지방정부 발전전략과 지역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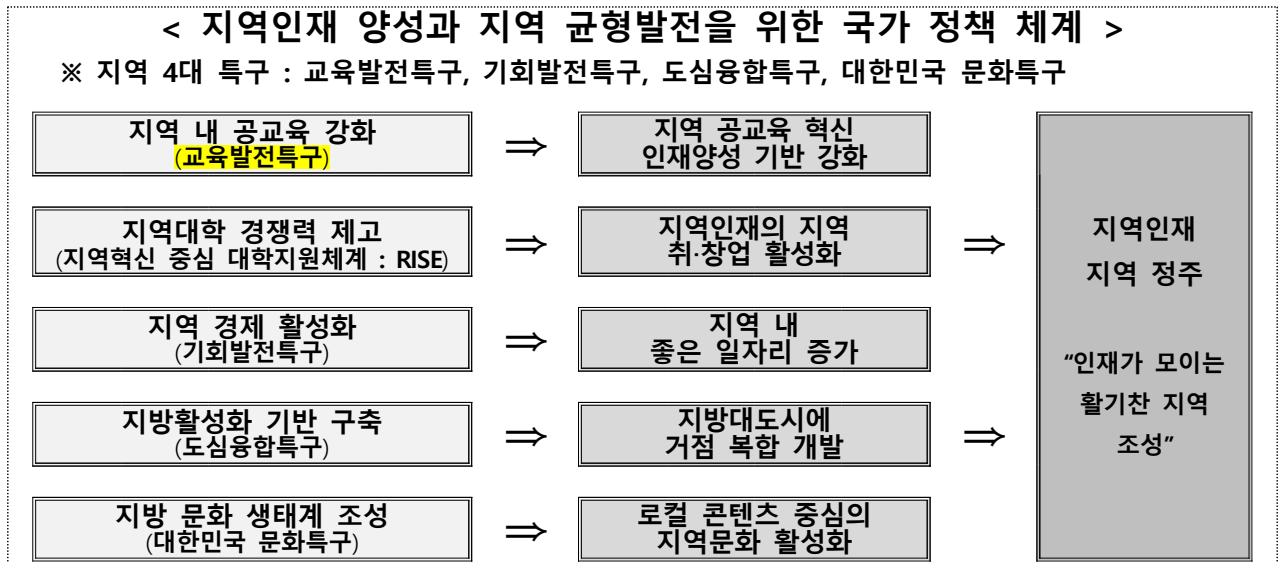
- ⇒ 지역의 교육·문화·거주 기반을 개선하여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체제 조성

☞ 지자체, 교육청, 대학,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**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**하고 지역 **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**하는 **교육발전특구** 추진

II.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

1 목적

-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



2 개요

- (개념) 지자체, 교육청, 대학, 지역 기업,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
- (지정 단위)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,3유형으로 운영
 -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
 -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(기초)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도 가능

유형	신청 단위	신청 주체
1유형	기초지자체	기초지자체장-교육감
2유형	광역지자체	광역지자체장-교육감
3유형	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	

- (지정 지역) 수도권이 아닌 지역

※ 다만,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(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 제24조 준용)

- (적용 특례)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

- (지역인재 생태계 조성)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·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지원
- (공교육 경쟁력 제고)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
- (지자체의 지원 확대)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 지역 권한 강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강화
- (규제 합리화)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

<<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>>



핵심 전략	지역 주도	▷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
	공교육 혁신	▷ 지역의 학생, 학부모,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 방안 도출 및 시행
	유기적 연계	▷ 유아-초중등-고등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-교육청-지역산업간 긴밀한 연계 하에 정책 시행
	지역 책무성	▷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되 명확한 성과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성 확보



기본 방향

- △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
- △ 지자체 지원 확대

- △ 공교육 경쟁력 제고
- △ 규제 합리화

I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(안) I

	유아·돌봄	초·중·고	대학
목표	·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	·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·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	· 지역인재 유출 방지
추진 방향	↓ ·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· 유보통합 시범운영	↓ · 공교육 경쟁력 제고 ·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	↓ · 고교-대학-지역 연계 강화 · 지역 인재 선발·양성
성과 지표	↓ · 출산율 상승	↓ · 학업성취도 상승 · 사교육비 감소	↓ ·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·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

○ (유아·돌봄 분야)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

- (맞춤형 유아교육·돌봄)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·확산
- (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) 지자체·교육청 협력 방과후·늘봄지원 센터 운영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 강화

○ (초·중·고 분야)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,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

- (지역 공교육 강화)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·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·재정적 지원
- (학교교육 혁신)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공교육 내실화
- (학생 성장 지원) 학업, 진학, 과학기술교육, 직업교육, 예체능교육, 최신 분야 학습 등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 지원

○ 고등교육 분야 : 지역인재 유출 방지

- (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)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
- (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)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교육 및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

Ⅲ. 교육발전특구 운영

1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 방안 마련

- (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 마련)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
- (타 특구와 연계) 지방시대 4대특구, RISE,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
- (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) 교육개혁* 과제와 연계를 통해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중점
 - * 늘봄학교, 유보통합, 교육의 디지털전환, 학교시설복합화 등
- (재정 지원) 기존 정책사업 연계 및 특교·균특회계 등을 통한 지원

<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(예시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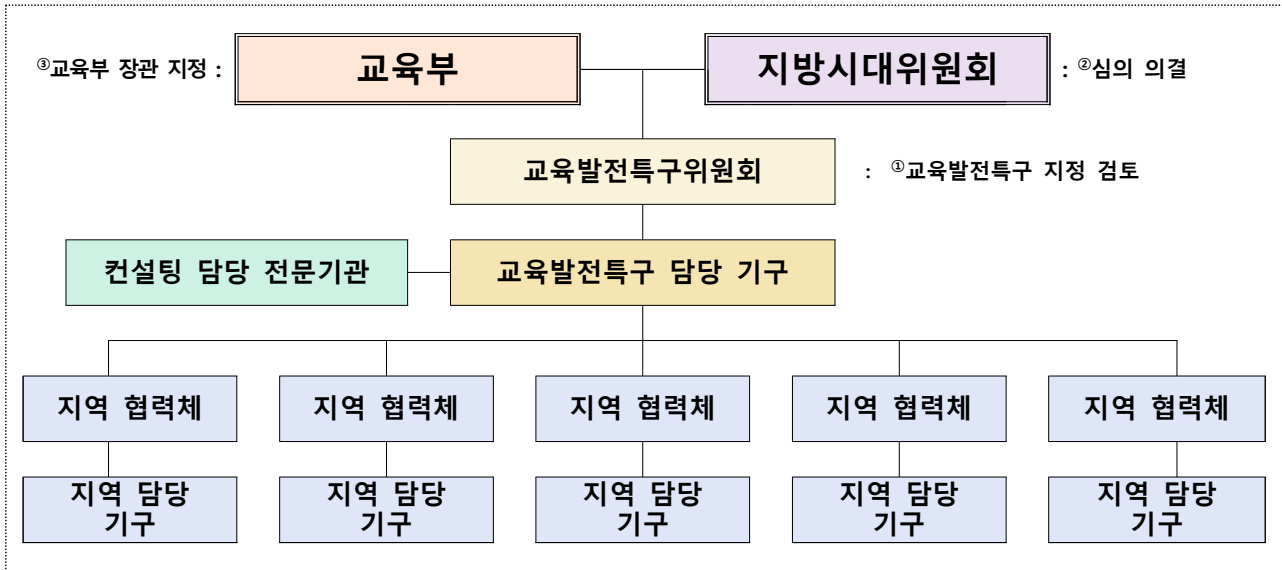
중점 추진 분야	주요 추진 내용(예시)
지역 중심 돌봄·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 확대 ▶거점형 돌봄센터, 교통 서비스 구축 등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돌봄 체계 구축 ▶지역의 책임교육·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▶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학력 격차 완화 지원 ▶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 특례 운영 ▶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지역산업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고교-대학-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▶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▶지역 산업의 특색에 맞는 인재양성 방안 수립 ▶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 마련 ▶대학의 인적 물적 핵심역량 지역 환원 ▶국가산단·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산업전략과 교육정책 연계
혁신도시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▶혁신도시-지역 교육기관 간 연계클러스터 운영 ▶개방형 연구실, 오픈캠퍼스 등 공공기관-대학 연계 강화 ▶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확대 ▶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

- (특례 적용)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추진

※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, 특구 지정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관심분야 중심으로 영역별 특화된 모델을 정하고,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례 중심으로 적용 가능

<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(안) >

단계	제 목	내 용
유아 돌봄	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	▷ 지자체·교육청 협력 돌봄 시스템 선도 모델 지원
	맞춤형 유아교육 활성화	▷ 교육과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·운영 ▷ 지역 맞춤 방과 후 과정 운영
초 중 고	학교,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	▷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 지원 ▷ 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▷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 운영
	교육행정 혁신	▷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 ▷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▷ 지역 산업체,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강사 임용 ▷ 교원 탄력전보제, 지역교원제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인사제도 운영 ▷ 지역 수요 맞춤형 교원 양성·연수 강화
	교육개혁 과제 우선 지원	▷ 디지털 교육혁신, 늘봄학교,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육 개혁과제 우선 지원
고교 대학 연계	지역인재 전형 확대	▷ 특구 소재 대학의 지역 거주자 입학 기회 부여 확대
	대학 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	▷ 대학교원의 지역 초·중고 수업 협력 등 지역 교육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강화 ▷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대학 후학습 및 취업 지원
대 학	지역 지원 강화	▷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인력양성,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자체-대학-지역산업 연계 강화 ▷ 지역대학 운영 및 구조개혁을 위한 지자체 차원 투자 및 행정적 지원 강화 ▷ 학교-교육청 선정 지역연계 장학제도 운영



- (교육발전특구 지정)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
 - (교육발전특구위원회) 교육발전특구 지정·운영 및 평가 검토
 - ※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
 - (교육발전특구 담당 기구)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전략 개발과 효율적 관리, 지역별 특성화 및 지속적 규제개선 등을 수행
 - ※ 교육부 내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부처, 시도지사 협의회, 시도교육감협의회, 대교협 등과 긴밀한 협력 추진
- (지역 협력체) 지역별, 유형별 교육발전특구의 운영·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,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
 - ※ 특구를 신청한 광역(기초)지자체장-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별,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특구 운영방안 심의(기초지자체 단위 지정 시 해당 기초 지자체장 참여 필수)
 - ※ 지방시대 4대 특구 및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 간 원활한 연계·협력을 위해 유사 협력체 조직과 지역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
- (지역담당 기구) 광역(기초)지자체, 교육청, 공공기관, 기업, 대학 등과 협조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획·운영
 - ※ 담당 기구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내 설치
- (행정 지원) 전문기관을 통한 지역별 이행계획 및 성과 창출 컨설팅

Ⅳ. 시범지역 지정 계획

1 시범지역 지정 개요

○ (신청 단위)

유형	신청 단위	신청 주체
1유형	기초지자체	기초지자체장-교육감
2유형	광역지자체	광역지자체장-교육감
3유형	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	

※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(기초)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

※ 3유형의 경우, 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'행정시'도 신청 단위로 지정 가능

○ (지정 지역) 수도권이 아닌 지역

※ 다만,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(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 제24조 준용)

○ (지정규모) 시범지역 지정 규모(개수)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,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

○ (운영 기간) 3년

-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

※ 시범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 검토

2 시범지역 신청

○ (신청방법)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(기초)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'교육발전특구 협약'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범지역 공모 신청기한 내 제출

※ 신청 전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(기초)지자체, 교육청, 이전 공공기관, 기업, 대학 등이 함께 지역협력체 구성 필수

영역	지정 주안점
1. 지정의 합목적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특구의 정책 목표에 시범지역 운영 방향이 부합하는가? □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을 제시하였는가? □ 지역 발전전략과 특구의 교육혁신 전략을 적절하게 연계하였는가? □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?
2. 사업계획의 우수성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특구 운영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한가? □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 충분한가? □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는가? □ 특구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가?
3. 연계·협업의 적절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·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는가? □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 □ 타 특구 및 지역발전사업, 교육개혁 과제 등과의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? □ 지역주민, 학부모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였는가?
4. 재정 계획의 적정성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특구 운영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? □ 지자체, 교육청, 지역 기관 간 재정 분담 계획이 적절한가?
5. 성과관리의 체계성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사업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? □ 달성 가능성이 높은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? □ 사업운영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?

▶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

시범지역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	□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시범지역 지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수립하여 공고	교육부
지정 신청	□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 ▶ 지역협력체 구성·운영 ※ 기초지자체 단위 지정 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참여 ▶ 교육발전특구 협약 체결 ▶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작성 ▶ 지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 ▶ 지자체장과 교육감 공동으로 지정신청	지자체와 교육청
지정 심사	□ 서면심사가 원칙, 필요 시 대면 및 현장심사 가능	교육발전 특구위원회
심의·의결	□ 특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·의결	지방시대위원회
시범지역 지정	□ 교육부 장관의 시범지역 지정	교육부
시범지역 운영 (3년)	□ 시범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 수립·추진 ▶ 교육부와 시범지역 간 협의 및 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 계획 구체화 ▶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시범지역별 특례 발굴 및 규제 개선 제안	시범지역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부

Ⅶ. 추진 일정

□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('23.12월~'24.3월)

-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('23.12.11~'24.2.9)
-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('24. 2월 중)
-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('24. 2월 중)
-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제1차 지정('24. 3월 초)

□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('24.5월~'24.7월)

-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('24.5.1~'24.6.30)
-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('24. 7월 중)
-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('24. 7월 중)
-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제2차 지정('24. 7월 말)

□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교육혁신 방안 마련 추진 ('24.2월~'24.12월)

- 특구 지역별 교육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진행('24.2월~12월)
- 지역별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특별교부금 등 지원 방안 추진('24.2월~12월)

순번	제목	연계 가능 내용
1	늘봄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늘봄학교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교육·돌봄 체계 구축 ▶ 지자체가 공무원, 행정인력을 교육청 및 학교는 재원과 프로그램, 공간을 제공하는 등 역할 및 자원을 분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운영 ▶ 학교 돌봄, 마을 돌봄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돌봄에 투입
2	자율형 공립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역별 상황·특성·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공고 2.0 모델을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일반고로 확산 ▶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을 통해 운영 모델 및 규제 혁신사항 논의
3	디지털 교육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'디지털 교육 선도·특화지구' 운영 ▶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에 발맞춰 AI 기반 학생 맞춤교육 지원, 공교육의 혁신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진흥 등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와 산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 양성
4	지역혁신 대학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RISE 시범지역 우수 프로젝트를 확산하고, 교육발전특구에서 우수한 운영 모델이 만들어져 지역-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게 연계 ▶ 교육발전특구 중점추진분야 중 대학과 관련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할 경우 RISE와 연계하여 우수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
5	학교복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특구 지역이 학교복합시설 신청시 우선 선정 추진 ▶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특구 내 학교복합시설을 신청할 경우 추가 재정 지원 추진
6	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관련 법률 제정 시 재정, 비자 등 특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며,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'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' 추진
7	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자체-교육청-지역산업체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특성화고 중심으로 한 실무 인재 양성 체계 마련 지원 ▶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, 다양한 지역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우수 지역 기업 참여 유도 ▶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교장, 교원 배치, 행정 업무 경감 지원 등을 통해 선도 모델 육성